

제40호(2013.1.17)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

이 계 임 이 동 소

1. 식품 위해 요인의 동향 3
2.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 7
3. 소비자 안심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02-3299-4316 jihchoi@krei.re.kr
내용 문의: 이계임 연구위원 02-3299-4326 lkilki@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신 가구 증가 등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에 대한 소비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임. 또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종위해물질의 증가,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식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외식 소비증대에 따른 위해식품 노출 증가, 잦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소비자들은 농업정책 분야에서 안전한 식품공급(51.0%)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 특히 식품종류별로는 축산물, 유통경로별로는 인터넷 쇼핑과 노점상 판매 식품에 대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 안전관리에서는 생산자, 중앙정부, 유통 및 판매업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이들 주체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8%이며, 가공식품, 외식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식품 피해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22.5%), 이물질 혼입(18.0%), 원산지 허위표시(14.0%)로 나타남.

식품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미흡(43.5%),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29.5) 및 식품안전관리 부처·기관의 분리(13.3%) 등의 순으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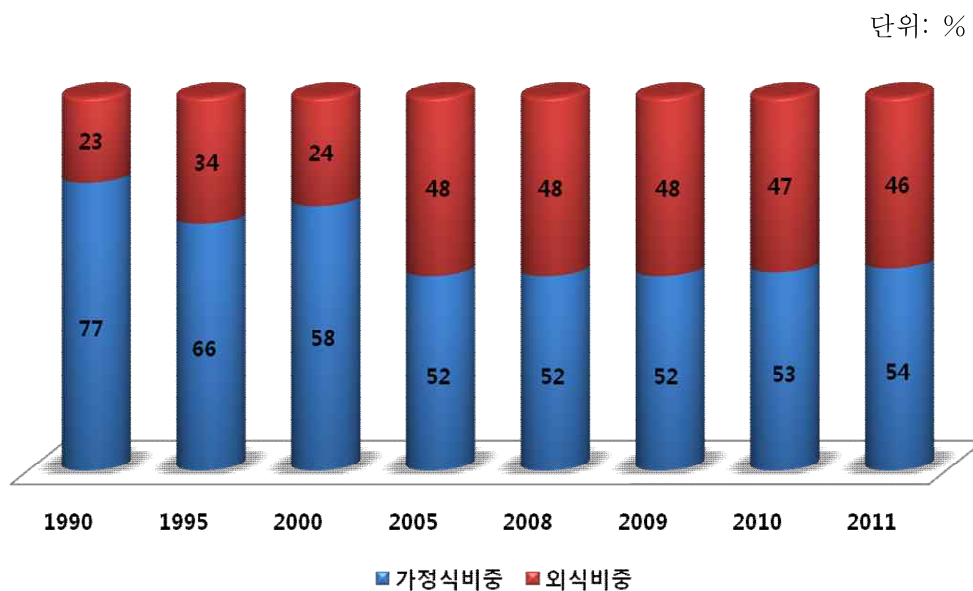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정보교류 확대와 소비자의 신뢰 강화가 필요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최종소비단계까지 통합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생산·가공단계에서 농식품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해야 함. 위험정보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소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소통 채널 확대, 농식품 인증·표시기준 합리화, 식품리콜 활성화, 농식품 이력추적기반 강화 등이 필요함. 정책대상별로 맞춤형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식품리콜과 이력추적기반을 강화해야 함.

1. 식품 위해 요인의 동향

1.1. 대내적 요인

-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신 가구 증가 등은 가공식품 및 외식에 대한 지출을 빠르게 확대시켜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를 초래
 -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는 가정 내 식품소비에 비해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식품 위해요소의 증대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
 - 가계의 한 달 평균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 지출비중은 1990년 23.0%에서 2011년 46.3%로 10년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
 - 외식산업 매출액이 1990년 10조 6천 6백억 원에서 2010년 67조 5천 6백억 원으로 연평균 9.7% 증가¹⁾

그림 1. 식료품비 중 외식비 지출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각 연도.

1) 외식업 매출액은 '07년 이전은 '음식점업', '07년부터 '음식점업 및 주점업' 매출액을 의미함.

- 식품의 대량 조리·유통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에 오염될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식품 안전사고 중에서 대표적인 식중독 사고도 최근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급증
 -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 건수가 2002년 77건에서 2011년 2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특히 외식에 대한 식품소비 지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비율이 2011년 기준 전체의 63%를 차지

표 1. 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 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1년	
		발생 건수	환자 수	발생 건수	환자 수	발생 건수	환자 수	발생 건수	환자 수	발생 건수	환자 수	발생 건수	환자 수
계		77	2,939	165	10,388	259	10,833	354	7,487	271	7,218	249	7,105
가정집		7	117	7	44	15	119	24	176	3	11	8	51
음식점		30	583	34	1,049	108	1,971	208	2,392	133	1,704	117	1,753
집단 급식	학교	9	806	57	6712	70	6992	39	2983	38	3390	30	2061
	기업체	7	586	15	1,026	23	1,081	22	633	15	799	10	460
기타		23	734	39	1,206	33	515	48	1,108	25	774	117	1,753
불명		1	113	13	351	10	155	13	195	57	540	33	2,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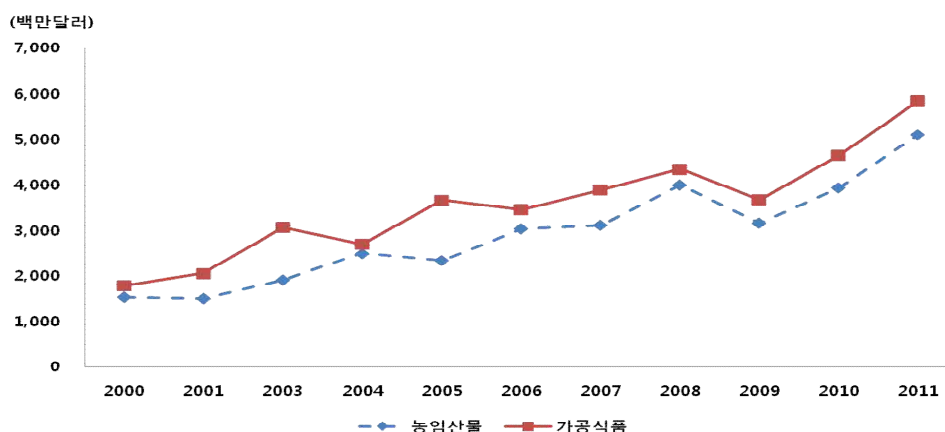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연도별. 식중독 통계시스템. <http://kfda.go.kr/e-stat>

1.2. 대외적 요인

-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식품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0~2011년 간 농임산물²⁾은 15억 4천 3백만 달러에서 50억 9천 9백만 달러로 연평균 11.5% 증가²⁾
 - 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동안 17억 8천 6백만 달러에서 58억 4천 8백만 달러로 연평균 11.4% 증가

2) 식약청 농식품수입통계는 식약청 검사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전체 농산물수입통계와 다를 수 있음.

그림 2. 농식품 수입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 출현으로 잠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소재 식품과 식품유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병원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사선조사식품의 시장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는 등 식품안전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환경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
 - 온도 1℃ 상승 시 식중독 5.27%, 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 4.27% 증가(보사연, '09)

1.3. 식품 안전사고 증가

- 신종위해물질 증가로 최근 식품 안전사고 발생 증가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발병(2010년), 생수 발암물질(2009년), 멜라민·광우병(2008년), 녹차 농약검출(2007년), 학교급식 식중독(2006년), 김치 기생충알(2005년) 등 농식품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화되어 소비자의 불안감 증대

표 2. 국내 농식품 위해 관련 사건 발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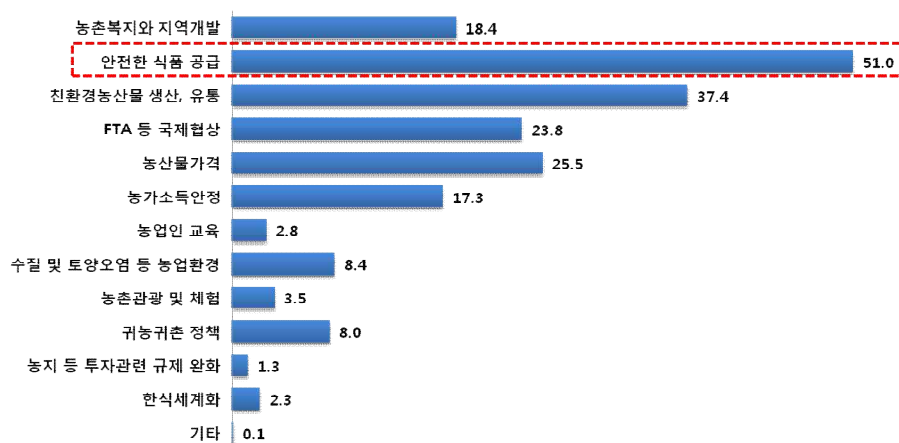
연 도	위해사건명
2003	• 조류독감발생 •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파동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초과 검출
2004	• 인삼 및 가공품의 BHC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 국내 불량 만두소 사건 • 불량 고춧가루 • 찐쌀의 표백제 사용 • 구기자 등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이상 검출 •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일부 육류에서 항생제 초과 검출
2005	• 김치 기생충알 및 낱 검출 • 장어·잉어·붕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2006	•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 중국산 냉동 꽃게 아황산나트륨 과다 검출 • 시판 올리브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2007	• 녹차에서 파라티온 농약 검출 • 고추장, 고춧가루에서 췌가루 논란 • 흑삼가공제품 벤조피렌 검출 • 수입김치에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 검출
2008	• 새우깡에서 이물질 검출 •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발견 •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검출 • 미국산 냉동 야채가공품 이물질 발견 •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 멜라민 오염사건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2009	• 생수에서 발암물질 검출 • 즉석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2010	• 분유에서 대장균 검출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 전국적 구제역 발병 및 확산 • 수입조미 쥐치포 방사선 조사 양성 반응
2011	• 대형유통업체 PB 제품(캔디류)에선 금속성 이물 검출 • 생식제품에서 대장균 검출 • 대형유통업체 PB 제품(김치)에서 식중독균 검출 • 대형유통업체 PB 제품(조미건어포류)에서 대장균 검출

2.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평가

2.1. 식생활 불만족 요인

-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식품교역의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민들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반면,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신종위해물질의 증가,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 증대로 위해식품 노출 확률 증가, 잦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짐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 수요 조사 결과 ‘안전한 식품 공급’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도시민의 식생활 불만족 요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2012.

2.2. 소비자의 안심 정도 평가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류별로는 상대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심 정도가 높았으며, 축산물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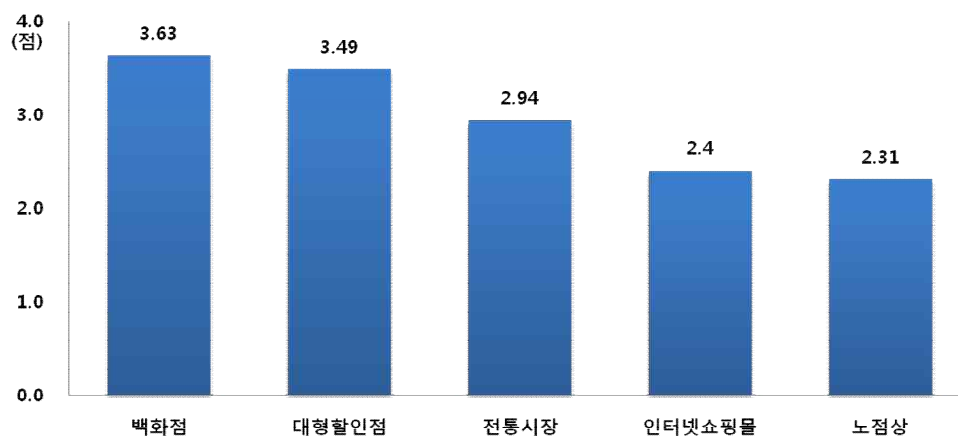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유통 농식품에 대한 안심 정도(척도 평균)



1) 1=매우 우려됨, 5=전혀 우려되지 않음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결과(2012.5)에 의하면 판매처별로 소비자가 평가하는 안전관리 수준은 백화점(3.63점), 대형할인점(3.49점)은 비교적 높은 반면 전통시장(2.94점), 인터넷쇼핑몰(2.40점), 노점상(2.31점)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

그림 5. 식품 판매처별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평가(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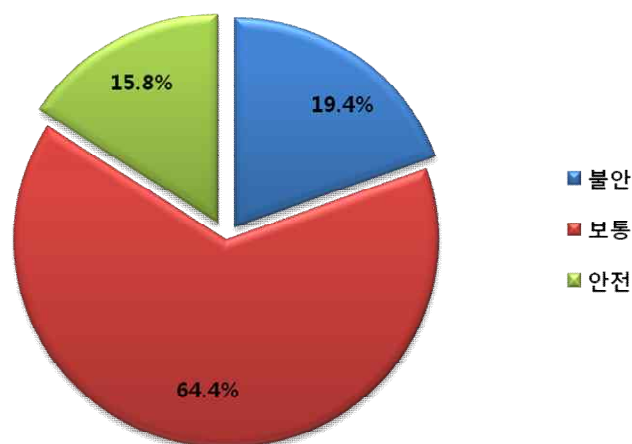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2

3) 조사결과는 최근 대규모 구제역, 조류독감 발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2012년 2.96점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에 비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6. 식품의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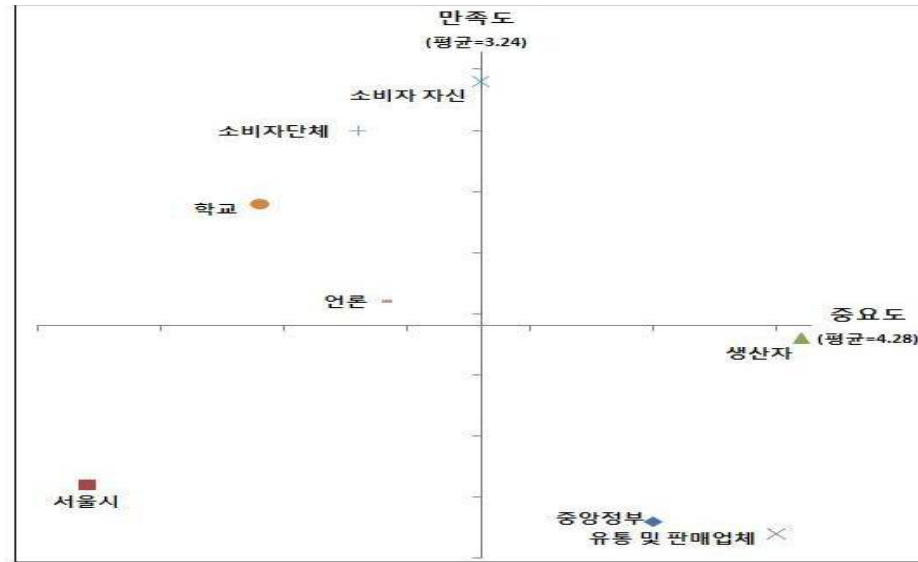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2

- 식품 안전 관리의 담당주체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매트릭스에 위치시켜 보면(그림 7),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생산자, 중앙정부, 유통 및 판매업자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이들 주체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안전 문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체과정을 통해 문제시될 수 있으며, 생산단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소비자와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7.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주체 속성별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

단위: 점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2.3. 식품 관련 피해 현황

-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8%이었으며, 가공식품(40.4%), 외식(27.7%), 농산물(21.3%), 수산물(6.4%), 축산물(4.3%) 순으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 식품피해 형태는 품질불량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19.8%) 섭취 후 탈이 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17.0%)한 사례가 많았음

표 3. 소비자의 식품 관련 피해 종류 및 피해 형태

단위: %

식품 종류		피해 형태	
농산물	21.3	이물질 혼입	19.8
축산물	4.3	품질불량	40.4
수산물	6.4	과대광고	2.1
가공식품	40.4	허위표시	4.3
외식	27.7	건강상의 문제 발생	17.0
계	100	바가지 요금	6.4
		계	100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 식품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피해 발생 당시 대처 방법을 조사한 결과 59.6%가 구입처에, 10.6%가 해당 회사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단체에 의뢰(6.4%)하거나 공공기관에 제보 및 신고(2.1%)하는 소비자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경험하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9.1%에 달함

표 4. 식품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경험

단위: %

항 목	비 율
해당 회사에 불만제기	10.6
구입처에 불만제기	59.6
소비자단체에 의뢰	6.4
공공기관에 제보 및 신고	2.1
인터넷을 통한 피해 공유	2.1
그냥 지나침	19.1
계	100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 식품 관련 피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소비자(29.0%)에 비해 불만족하는 소비자(44.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피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한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26.3%)되거나 알선·분쟁해결까지 책임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15.8%)’과 같이 처리내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피해신고나 상담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18.4%), 신고절차가 복잡하고(13.2%), 담당 직원이 불친절 하거나(7.9%)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7.9%)’ 등 신고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음
- 식품 피해 중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22.5%)였고, 그 외 이물질 혼입(18.0%), 원산지 허위표시(14.0%), 유통기한 미기재 또는 허위표시(13.8%)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5. 식품 피해 중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

단위: %

항 목	비 율
이물질 혼입	18.0
유통기한 미기재 또는 허위표시	13.8
기능의 허위 과장 표시	8.5
함유 성분 미표시	6.0
원산지 허위 표시	14.0
판매가격 미표시로 인한 불공정 거래	6.3
유전자 조작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	6.8
영양성분 미표시	0.5
알레르기 발생	2.8
중량 미달	1.0
신선하지 않거나 상한 제품	22.5
기타	0
계	100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2.4. 식품안전 정책의 문제점

- 식품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응답자의 43.5%가 식품안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29.5%) 및 식품안전관리 부처·기관의 분리(13.3%)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함

표 6. 식품 관련 소비자안전정책의 문제점

단위: %

항 목	비 율
식품안전 관련 사항 위반 시 처벌 미흡	43.5
식품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미흡	29.5
식품안전 관리 부처·기관의 분리	13.3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 정보 제공 미흡	11.0
식품안전 관련 기초 조사와 연구의 부족	2.8
계	100

자료: 서울시 거주자 400명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2010 농촌경제연구원)

3. 소비자 안심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3.1.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합된 안전관리

- 식품 안전은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최종소비단계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푸드 체인상의 각 단계에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농식품 안전관리의 일관성·전문성·효율성이 요구됨
 - 현재 품목별로 수행되고 있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업무를 기능별로 재편한 후 통합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을 통합하여 다수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위험관리의 불합리한 점과 모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임
 - 분산된 위험관리 체계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농식품안전 정책을 기획·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취약해져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 농식품안전관리는 유통·소비단계에서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의 사후관리보다 생산·가공단계에서 농식품 위해요소를 적극 방지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관리로 전환되어야 함
- 농축수산물의 생산 환경 및 농약·동물용의약품·사료를 관리함으로써 농장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립하고, 농식품 제조업소의 HACCP 인증 강화로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 자율적용 대상의 HACCP 확대, 의무 적용대상 HACCP의 위생기준 강화, HACCP 지원 및 컨설팅 확대, 소규모 전통식품업체에 적용가능한 모델 개발 등이 필요

-
- GAP인증, 이력추적제 농산물의 생산량 비중을 높이기 위해 GAP관리 시설 지정의 확대,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소비자 홍보 강화가 필요함

3.2. 위험정보교류 확대

□ 위험평가의 투명성 제고

- 식품에서의 위해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소비자 들은 위해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시스템은 과학 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
 - 우리 사회에는 위험정보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 여, 소비자 불신이 조장되고 소비자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위험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 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위험정보교류 기능 강화

- 정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식품 위해정보 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함
 -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해정보, 부적합실적, 회수실적, 식품관리현 황, 기타 식품 관련 정보 등의 교류 확대가 필요
- 소비자를 위협하는 다양한 식품 위해정보를 대상으로 수집범위를 확대 하고, 위해정보의 수집채널을 보완하여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유관기관, 학계, 업계, 병원 등 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 집·통합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빠른 시간 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
- 위해정보 발생 시 해당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 련 정보의 분석 및 조치 결과 등을 즉시 통보받는 대응체계를 마련함

- 식품 위해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정확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함.
 - 대중매체 이외에도 기업의 홈페이지, 이메일, 휴대폰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통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3.3. 소비자의 신뢰 강화

□ 소비자 소통 채널 확대

- 소비자·생산자·전문가·식품업계·언론·정부의 6자 협력체계를 통해 농식품 정책 관련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함
 -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단위 안전관리 협의체로 확대·발전
- 정책대상별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및 교류를 위해 맞춤형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를 강화함
 - 올바른 농식품 취급 방법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소비자단체, 학부모, 은퇴교사, 관련 업체, 정부를 통합하는 소비자 교육 강사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언론매체와 연계추진하며, 대상별(소비자의 사회·인구적 특성, 언론 및 오피니언 그룹,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그룹 등) 및 매체별(TV, 라디오, 광고, 온라인 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농식품 인증·표시기준 합리화

-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기반을 구축함
 - 2012년부터 통합 실시되는 농식품 인증표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민간 인증기관 지정·관리 선진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목적별 정보를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함
 - 식품소비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배달음식, 음식점, 가공식품 등의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통신거래의 빠른 증가를 반영하여 표시제 운영 방식을 전환
 - 표시방식은 소비자가 표시를 쉽게 찾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
 - 둔갑우려가 높은 품목과 장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시스템 강화
 - 신속하고 과학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위반사항의 세부정보 등의 공유
 - 유전자(DNA) 식별방법 개발 확대 등 과학적인 식별법 개발 확대
 -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원 강화로 자율 참여 확산
 - 단속업무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조

□ 식품리콜 활성화

- 이력제 확대, 브랜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농수산물 리콜 관련 법령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식품 관련 리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만 명시,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급박한 경우 ‘긴급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강제 리콜 조항이 있으나, 강제 리콜 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리콜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소비자의 리콜 정보에 대한 쉬운 접근이 가능하려면 리콜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장이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품목별·지역별로 리콜의 관리·감독 부처가 달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

-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 징벌배상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리콜 명령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중처벌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는 반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징금만 납부하면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

□ 농식품 이력추적기반 강화

- 농식품 이력추적체계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심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기반임
 - CODEX에서도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으며, EU를 중심으로 “식품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의무화
- 이력추적 기반 확대를 위해 식품거래 전반에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조항을 마련하고, 생산단계의 시행기반 조성 및 유통단계의 거래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추적과 소급기반 조성에 있으며, 생산자의 품질관리 효율화와 소비자 정보 제공 등 추가적인 목적과는 구별
- 식품거래 전반에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조정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력관리표시제도는 현행법대로 두고, 전면적 이력추적 기반은 표시의무 없이 기록보존 의무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
- 현재의 복잡한 농식품유통 형태에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력추적관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 16

발 행 2013. 1. 17

발 행 인 이동필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419-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